

전진숙, 아동 사망 사건 ‘출생차별’ 실태 정조준

국감서 복지부 책임 강화 강력 요구

국가 조사 부재·출생등록 지연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을)이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복지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

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

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 (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

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태어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원에 불과해 75만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관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 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과방위 국감 비공개 전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피감 기관 감사원 평가 더 나빠졌다

2023년 70.1점→2024년 64.8점 하락
박근혜 “신뢰받는 감사원 거듭나야”

윤석열 정권 시기인 2024년 감사원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평가가 2023년 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1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과 2024년 ‘감사원 감사 활동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 부담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의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낮아지면서 ‘종합만족도’ 역시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이

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 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태도 ▲공정성 ▲전문성 ▲감사 부담 등의 순으로 변동이 없었고,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으로 갈수록 감사원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사 업무와 관련,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행정현실에 대한 감안 미흡’이었고, 3순위 응답까지 종합한 순위로

는 ‘감사기간의 장기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4개 평가 항목별로 자유롭게 적어내는 개선 의견에서는 ‘피감기관의 행정 현실 고려(전문성)’가 2023년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24년에는 ‘감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가중(감사 부담)’이 제일 많았지만 ‘권위적·고압적 태도 지양(감사 태도)’의 경우 2개 연도 각각 공동 1위와 1건 차이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감사원 고위직들과 그에 동조한 일부 인사들이 무리한 운영으로 조직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감사원 개혁 추진 과정도 꾸준히 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감사 운영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 및 수감기관 감사 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2023년에는 315명, 2024년에는 307명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문상필 前시의원, 민주 부대변인 임명

“지역 목소리 중앙정책 반영 최선”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문 부대변인은 앞으로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임명식에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 정청래 대표를 대신해 문 부대변인을 비롯한 48명의 신임 부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부대변인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을 맡아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 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으로서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는 6·7대 재선 광역의원,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이재명 대선 조직본부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문상필 부대변인은 “당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께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취지 못살리는 ‘공연예술 지역유통사업’

4년간 신청 1천109곳 중 76개 단체 독차지
조계원 “지역예술공연 유통 통로 다변화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에만 쏠리는 등 지역 예술 생태계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울)이 16일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청건수 1천184건 중 실제 1회 이상 공연을 수행한 단체는 367곳 (33%)이었다. 이는 신청단체 1천109곳 중 나머지 742곳 (67%)은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5회 이상 공연을 수행한 단체가 76곳이었는데, 이들이 4년 동안 총 611건 (51.6%)이나 선정돼 과반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 단체의 반복 선정이 굳어지면서 창작 다양성 훼손, 지역 기반 단체 위축, 신규 단체 유입 축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계원 의원은 “예술의 지역 균형과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게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의 본질”이라며 “지역 예술 생태계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세금으로 만드는 무대는 더 많은 단체의 ‘첫 무대’가 돼야 한다. 첫 선정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예술공연의 유통 통로를 다변화할 때 지역 관객의 선택권과 문화 향유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이번호
220603-중-139779